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2.(목) 11:00,
(지면) 2023. 6. 23.(금) 조간

배 포 2023. 6. 22.(목) 06:00

부산항 북항 1단계 시설물 이관과 잔여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한다

- 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간 협의체 운영, 6. 23.(금) 첫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조기 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3일(금) 첫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2023. 3.) 이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부산시 등과 시설 이관 협의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관과 시설물 이관 관련 협의 사항이 다양하여 논의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세 기관은 시설물 조기 이관을 위한 의견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이관하는 한편, 지난 3월 유찰된 랜드마크 부지의 재공모와 1단계 잔여 부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 잔여부지 : 랜드마크 부지(11만㎡) 포함 15개 필지(약 18만㎡)

특히,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국내외 언론 및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투자컨설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1단계 잔여 부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무협의체에서 공공시설물 조기 이관 및 투자유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부산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단 장	이상호 (051-604-3100)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강민구 (051-604-3113)

□ 추진배경

- 북항 1단계 주요 공공시설물이 준공(‘23.3)됨에 따라 관리청 이관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필요
 - *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1단계 조성 부지 112만 m^2 중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지 81만 m^2 를 제외한 매각 대상부지는 31만 m^2 이며, 현재 13만 m^2 (43%) 분양 완료
 - 1단계 랜드마크(11만 m^2) 포함 잔여부지(18만 m^2) 투자유치 전략마련 필요

□ 구성방안

-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준공 및 활성화 실무협의체
- 우리부, 부산시, BPA 실무조직으로 구성
 - 우리부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청(해양수산환경과, 항만정비과)
 - 부산시 : 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 BPA : 항만재생사업단(재생개발실, 뉴딜사업부)

□ 운영방안

- 북항 1단계 시설물 이관 및 투자유치 관련 안전 발생시 수시로 개최
 - * 논의 안전별로 관련 기관만 회의 참석 논의
- 주요 논의안건
 - 준공시설물 별 준공 진행사항 확인 및 쟁점사항 논의
 - 북항 1단계 잔여부지 투자유치 방안 논의
- * BPA : 투자유치를 위한 언론 및 투자자 대상 IR, 투자컨설팅 용역 등 방안 마련

참고2

[1단계] 준공시설물 이관

□ 추진배경

- 북항 1단계 주요 공공시설 준공('23.3)으로 관리권 및 소유권 관리청 이관 추진
 - *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이관 대상시설 현황

- ① 공 원(부산시) : 196천㎡ 중 180천㎡(조성을 92% / 동구 52%, 중구 48%) 조성 완료
 - * 문화1~3, 역사2은 '23.3월 부분준공확인증명서 교부, 문화5, 6은 '24년까지 완공
- ② 도 로 : 1-1, 1-2단계 3.445km(도로 8개소, 차도교 3개소, 보도교 5개소 등)
 - * 주요도로 이관(부산시), 간선도로 이관(중·동구청)
- ③ 지하주차장(부산시) : 연면적 23,519㎡(지상2층, 지하3층, 부대시설 등)
- ④ 보행데크(동구청) : 503m(광장 2개소 및 공중보행교, 동구청)

